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직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18세도 국회 의원 선거 출마 가능
○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금지, 경찰청이 두 달간 집중 단속 실시 결정
○ (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 중 A에 따르면 정치란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 같은 국가 차원의 권력 행위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시된 사례 중에는 정치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반면 B에 따르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이 정치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사례 모두 정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① A는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B는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③ A와 달리 B는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갈등 조정 행위를 정치로 본다.
④ B에 비해 A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⑤ (가)에는 '청소년 시민 단체, 내부 협의를 거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선언문 발표'가 들어갈 수 있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보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반할 경우 법은 오히려 불의의 제도화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합법성에만 의존하는 A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B는 "법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 법이 정의로운가"를 물음으로써, 법의 실체적 정당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① 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인권을 위협하는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② B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③ A와 달리 B는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통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3.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 문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생계 급여 지원 확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생계 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됩니다.

①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② 남북 분단 상황을 전제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국가가 국제 법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민주주의가 결합한 원리이다.

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B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갑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각각 가결하였다. 이후 A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 법률 제정을 위해 재적 의원 296명 중 168명이 출석하여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정부로 이송된 ○○ 법률안에 대하여 C가 이의서를 붙여 A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하자, A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쳤다. ○○ 법률안 재의 안건 표결 당시 A의 재적 의원은 296명이었으며, 출석 의원은 재적 의원보다 2명 적었다. 출석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였고 기권은 없었으며 무효표는 4표였다. 이후 D는 갑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C는 E의 임명 제청권자인 B에 대한 A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A가 B, E에 대한 헌법상 해임 건의권을 갖지만, C가 반드시 그 건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헌법 개정안에 대한 A의 의결에서, A의 재적 의원 수와 찬성 투표한 의원 수가 ○○ 법률안의 최초 의결 당시와 같다면 해당 헌법 개정안은 가결된다.
② A의 ○○ 법률안 재의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반대표와 무효표의 합이 찬성표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E는 모두 행정 각 부의 장(長)이지만 행정 각 부의 장(長) 모두가 E는 아니다.
④ D는 B가 발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그 명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⑤ D의 재판관 9인과 B는 모두 A의 동의를 얻어 C가 임명한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가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납부한 갑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자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당해 재판 계속 중,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헌법 재판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헌 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가)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갑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보다 법의 이념인 A를 더 중시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해당 조항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A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의 이념인 정의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 기>

ㄱ. 갑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ㄴ.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가) 제청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ㄷ. A는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ㄹ. 헌법 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A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치와 법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또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갑국과 을국의 의회 전체 의석수는 각각 200석이며, 갑국과 을국 모두 t~t+2 시기 중 정부 형태가 1회 변경되었다.

○ t+1 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서로 다르고, 갑국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B당, 을국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Y당임.
○ t+1 시기, t+2 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수는 다음과 같음.

<갑국>

구분	A당	B당	C당
t+1 시기	30석	60석	110석
t+2 시기	20석	40석	140석

<을국>

구분	X당	Y당	Z당
t+1 시기	40석	90석	70석
t+2 시기	60석	110석	30석

* 갑국과 을국 모두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고, 각 시기 내 의회 전체 의석수 및 정당별 의회 의석수의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함.
*** 의원 내각제인 경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연립 내각은 구성되지 않음.

① t 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라면, t+2 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② t+1 시기와 t+2 시기에 을국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t 시기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③ t+1 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와 t 시기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면, t+1 시기와 t+2 시기에 을국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서로 다르다.
④ t 시기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고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면, t+2 시기 을국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⑤ t+2 시기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고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B당 소속이라면, t 시기 을국의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은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각각 선출한다.

7.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그 의사 표시 안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을에게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한 갑은 이를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갑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A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갑은 B에 따라 을이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A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국가나 다른 개인이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② A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계약 성립 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도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B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B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가해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B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공 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각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스스로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 A에 따르면 인공 지능이 적용된 군사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국가가 안보를 위해 경쟁하는 존재라기보다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라고 보는 B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서 인공 지능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군비 경쟁과 그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① A는 국제 문제 해결에서 국가보다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② B는 집단 안보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형성을 통해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③ A와 달리 B는 국제법을 제정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간 갈등을 보편적 선(善)이나 윤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간과한다.

[9~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체육 시설이 열악하였다. 이에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은 ○○시 지방 선거를 준비하며 소속 구성원들에게 자체 설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인 <설문 결과 1>을 바탕으로 문화·체육 시설 건립에 관한 공약을 수립하였다. 이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A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결과 2>를 발표하였다.

<설문 결과 1>

시설 건립 시 기대 효과	비율(%)
지역 경제 활성화	73.5
주민 건강 증진	19.2
기타	7.3

<설문 결과 2>

시설 건립 시 기대 효과	비율(%)
주민 건강 증진	77.4
지역 경제 활성화	16.7
기타	5.9

B는 <설문 결과 2>를 인용하여 체육관 건립 추진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고, C는 D가 실시한 조사의 결과인 <설문 결과 1>을 인용하여 공연장 건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A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지역 상인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 건립을,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집단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관 건립을 주장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한편 [(가)]은/는 [(나)]이/가 체육관 건립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건립된 체육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제기되자 ○○시 주민들은 ㉡ 주민 감사 청구를 하였다.

9. 위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임.) [3점]

<보 기>

ㄱ. A와 달리 D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ㄴ. B와 달리 C는 구성원의 특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ㄷ. 정치 과정에서 ㉠과 ㉡ 모두 산출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위 자료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① (가)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② (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가)와 달리 (나)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⑤ (나)가 제정한 규칙의 시행을 위해서는 (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이 개설한 병원이 의료 급여 기관으로서, 수급권자인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법에 따라 의료 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갑의 병원은 의료 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비용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심사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그 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규정으로 인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의료 급여 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여 갑의 A를 제한한다.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②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다.
③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 고등 법원의 판결 내용 요약
>
> **[재심 판정의 경위]** □□ 회사가 근로자 갑을 해고하였다. 이에 갑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원고는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 지방 노동 위원회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구제 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갑과 원고 및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각각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 노동 위원회는 □□ 회사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고 … (후략) ….
>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조합원 갑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① 이 사건 원고는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갑과 원고 모두 근로 기준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의 침해를 이유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 고등 법원에 항소하였다.
⑤ 갑은 ○○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임.)

> A는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에 대해 사법 기관인 B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B는 기후 변화 관련 조약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도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B의 권고적 의견을 지지하고 각국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 결의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의결에 필요한 찬성표의 수는 확보되었으나,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C의 상임 이사국 2개국은 반대 투표를 하였다.

① C와 달리 A는 국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B는 C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그 결정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③ ㉡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국제 규범에 한정된다.
④ 표결의 결과, ㉢은 가결되지 않았다.
⑤ ㉡과 달리 ㉠은 국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졸업식 날 갑과 을은 다음 달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을이 여행 일정을 짜고 여행 상품을 알아보는 대신 갑이 을에게 고가의 ○○ 가방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갑의 친권자 A와 을의 친권자 B는 갑과 을의 ○○ 가방 증여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며칠 후 갑은 19세가 되었고, 그다음 날 A가 을에게 ○○ 가방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는데, 그날 저녁 갑이 ○○ 가방을 을에게 인도하자 을은 그 가방을 수령하였다. 이후 을은 자신을 성년자로 위조한 신분증을 병에게 제시하면서 ○○ 가방을 구매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신의 의사 표시가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병은 을에게 그 가방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병의 법정 대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갑, 을의 여행에 대하여 을이 여행사 사장 정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이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자 을은 B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을은 정에게 여행 계약에 따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일을 여행 종료일로 정하였는데, 정은 여행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약속된 지급일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① 갑이 19세가 되었을 당시 갑은 B에게 갑과 을의 ○○ 가방 증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② A가 을에게 ○○ 가방 증여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날,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승낙함으로써 갑과 을의 ○○ 가방 증여 계약이 성립하였다.
③ 을이 병으로부터 ○○ 가방 대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을은 병에 대하여 ○○ 가방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④ 정이 여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을 당시 정은 을과의 여행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갑, 을의 여행 종료일 이후 갑, 을은 각각 정에 대하여 여행 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 소유 ○○ 공원에 설치된 을 소유 □□ 놀이 기구는 강풍을 견디지 못하게 설치되어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중단 사유를 모르는 갑은 □□ 놀이 기구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갑은 ○○ 공원에서 음료 판매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갑의 직원 A(18세)가 음료 판매 시설을 고의로 망가뜨린 B(16세)와 다투다 B를 폭행하여, B는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었다. 이후 B가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A와 B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확정 판결로 갑에게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갑은 음료 판매 시설의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을의 직원 C가 을의 지시로 □□ 놀이 기구를 점검하기 위해 ○○ 공원에 들렀는데, 강풍에 쓰러지는 □□ 놀이 기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D의 자전거를 망가뜨렸다.

① A와 B의 합의 이후 A는 B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② A의 친권자는 A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B에 대해 A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B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음료 판매 시설을 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리 기간 동안 갑에게 발생한 휴업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갑은 C에 대하여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⑤ 을이 C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을은 C의 사용자로서 D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이 임차한 주택에서 혼인의 의사 없이 갑과 살고 있던 을은 A를 출산하였다. 이후 갑은 A를 인지하고 을과 헤어졌다. 다음 해 갑은 병과 법률혼을 하였고, 한 달 후 을도 정과 법률혼을 하고 B를 출산하였다. 1년 후 정이 A를 입양함으로써 그때부터 A는 정의 성과 본을 따랐는데, 정이 집을 나가 3년간 생사가 불분명하자 을은 정과 이혼하였다. 같은 해에 갑과 병은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는데, 1년 후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① 을이 A를 출산하였을 당시 갑과 을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B의 출생 당시 B는 A의 친족이지만, 병은 A의 친족이 아니다.
③ 행정 관청에 을과 정의 이혼 신고가 된 때부터 을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④ 갑과 병의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⑤ 갑의 사망 당시 A는 갑의 상속인이다.

17.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와 유사한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A에 위배된다.
> ○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범죄의 동기와 상관없이 유기 징역과 무기 징역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하므로 B에 위배된다.
> ○ '음란'과 달리 모호한 개념인 '저속'을 구성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 규정은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C에 위배된다.

① A는 범죄와 형벌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B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벌 법규의 소급 적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C는 형벌의 내용이 구성 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B와 달리 A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원칙이다.
⑤ B와 C 모두 입법자를 구속하는 원칙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21세)은 을 몰래 훔친 을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결제하였다. 이후 갑은 병(13세)에게 그 카드를 건네주며 무인 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해 오라고 시켰고, 병은 그 카드가 갑이 훔친 카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였다. 을의 신고로 갑이 체포되었고, 경찰의 조사 결과 다수의 범죄가 드러났다. 이에 적법하게 구속된 갑을 검사 정이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경찰은 갑의 진술을 토대로 병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① 갑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에 대한 1심 판결 확정 후 일정한 범행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갑은 정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정은 병에 대하여 연령을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30세)은 자신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을(20세)은 산책을 하던 중 야생 멧돼지가 자신을 공격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갑의 행위와 을의 행위가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은 충족하지만, 갑의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A가, 을의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B가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 기>

ㄱ. 형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행위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모두 인정된다면 A가 인정된다.
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B가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B가 부정될 수 있다.
ㄷ. 갑과 달리 을에 대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행위가 아닌 행위자를 그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중 하나임.) [3점]

> ○ 갑국의 의회는 30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 ○ t-4년 실시된 갑국의 초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임기 6년인 의원 100명, 임기 4년인 의원 100명, 임기 2년인 의원 100명을 선출하였고,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이 발생하는 해마다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임기 6년의 의원을 100명씩 선출하고 있다.
> ○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같으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 ○ t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직후 갑국은 선거구 제도만 [(가)]에서 [(나)]로 변경하였다.
> ○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선거구별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 t-2년, t년, t+2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 수를 합한 t+2년 정당별 의회 의석수는 A당 45석, B당 135석, C당 120석이다.
> ○ t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당선자 수는 B당이 A당의 4배, C당이 A당의 5배이고, 표는 t년 대비 t+2년, t년 대비 t+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당선자 수 변화를 나타낸다.

구분	A당	B당	C당
t+2년	50% 증가	50% 증가	50% 감소
t+4년	50% 감소	변화 없음	10% 증가

* 정당은 A~C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무효표는 없음.
** 의회 의원 수는 300명으로 유지되었고, 의원이 임기 만료 전 도중에 교체된 적은 없으며, 의원의 당적 변경은 없음.

<보 기>

ㄱ.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ㄴ.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C당 소속 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되었다.
ㄷ. t+4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B당 소속 의원 수보다 t+4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B당 소속 의원 수가 많다.
ㄹ. t+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